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출범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공생발전 정착**에 앞장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이미지 제고, 공생발전을 이끌어낼 핵심 허브로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18 권도엽 장관 주재로 제1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열고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개선,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근절, 건설근로자 고용여건 개선 등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편집자 주]

공생발전위원회는 발주자와 원 · 하도급 건설사, 건설근로자, 건설단체 등 건설생산 과정에 참가하는 모든 주체는 물론 문화 ·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며 이지송 LH공사 사장을 비롯한 발주기관 대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을 비롯한 건설업계 대표, 그리고 이성우 국민대 총장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비고
정부 (2인)	국토부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공동위원장
	정내삼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장	
발주자 (4인)	이지송	LH공사	사장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	
	김광재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건설업체 (6인)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원도급업체
	김종인	대림산업	부회장	
	김 혁	산양공영	사장	
	이재림	보림토건	사장	
	최흔주	(주)유신	사장	엔지니어링
	민경렬	(주)도화엔지니어링	사장	
건설노조 (1인)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노조대표
민간전문가 (5인)	이성우	국민대 건설산업비전포럼	총장 대표	* 민간 전문가 중 1인은 국토부 장관과 공동대표
	이태식	한양대 대한토목학회	교수 회장	
	노선희	씨알-텍	사장	
	배기동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태호	제일기획	전무	
관련단체 (3인)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박덕흠	전문건설협회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간사	박민우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

위원회는 앞으로 △건설문화 개선 및 이미지 제고 △건설산업 참여주체간 공생발전 정착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부정부패와 낙후된 이미지로 점철된 건설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고 윤리경영을 확산시켜 건설업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과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설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기를 증진시키는 방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찰보증시장을 선진화하는 방안, 건설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도 공생발전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이날 첫 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지금까지 건설업계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생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원·하도급의 상호협력에만 치중해 건설근로자 육성,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 건설산업 전체의 공생 문제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 "민간 주도의 위원회가 앞으로 공생발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신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생발전 추진 과제

■ 건설문화 개선 및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

건설산업은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민의 주거·생활환경을 안정시키는 등 수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부정부패 등 부정적인 이미지 탓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에 따라 공생발전위원회는 건설산업 이미지를 '문명', '가치창조', '문화', '삶의 터전' 등 긍정적이고 소프트한 이미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동시에 범 업계 차원에서 사회공헌사업과 윤리경영을 확산시키는 과제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건설기업과 기업인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에 기반을 둔 성숙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작업이 긴요하다"며 "앞으로 위원회는 건설문화 개선과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참여주체 간 공생발전 유도

지금까지 공생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은 주로 건설업체인 원·하도급 업체 사이의 거래관행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앞으로는 공공 발주자가 공생발전 정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는 그동안 원·하도급자 사이의 불공정거래관행에 치중해 왔던 기존 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건설산업 전체의 선진화와 이미지·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공생발전 정책에서는 '건설시장의 룰'을 집행하는 리더이자 최대 수요자인 공공 발주자가 빠진 채 원·하도도급 업체 간의 공정거래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개선, 발주자에 대한 건설공사 클레임 제도 도입 등 발주자·원도급 관계의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생발전위원회는 이를 위해 계약단계에서 발주자의 자의적 공사비 삭감 등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이행단계에서 발주자가 계약단가를 선제적으로 조정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식기성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건설현장 기성청구 및 지급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기성금과 하도급대금이 제 때 지급되도록 유도하며 발주자에 대한 건설공사 클레임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공생발전위원회는 또 원·하도급 관계에서는 상생협력펀드를 통해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원

하는 방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지급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하도급대금의 어음지금을 점차 축소하는 방안, 상호협력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발주자-원도급자 관계

① 계약단계 및 계약이행단계에서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개선
- (계약단계) 발주자의 자의적 공사비 삭감 등 불공정 관행 개선
- (계약이행단계) 발주자가 계약단가를 선제적으로 조정

② 약식 기성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건설현장 기성청구 및 지급방법 개선하여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 유도

③ 건설공사 클레임(건설사 → 발주자) 제도 도입 검토

▼발주자-하도급자 관계

① 적정 수준의 하도금대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② 하도급 대금 미지급 · 지연지급 등 행위 근절방안 검토

③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통보된 내용대로 이행하는 지 정기 점검

* KISCON에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기한, 지급횟수 등을 추가

④ 민간부문의 하도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예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등재된 공사만 시공능력평가 순위 산정시 실적으로 인정 등

▼ 원도급자-하도급자 관계

① 상생협력펀드*를 통한 협력업체 자금 지원

* 대형업체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성 · 운영중이며, 시중금리 보다 최소 1% 낮게 적용

〈 6대 건설기업 상생협력 펀드 조성 및 지원현황(자료 :건협) 〉

구 분	합 계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	대림산업	대우건설
조성액	2,400억	600억	250억	400억	450억	300억	400억
지원액	1,858억	320억	49억	186억	45억	45억	20억

②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지급절차 개선

* (예시) 발주자 및 보증채권자로부터 증빙자료가 제출되어 조합이 보증금 지급을 결정한 후 5일이내(현행 7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 신속하게 자금 지원

③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 및 해소대책 마련

④ 하도급대금의 어음지급 관행을 점차 축소시켜 나가고, 현금 및 현금성 대금지급 확대

⑤ 상호협력 우수업체('11년 2,668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건설근로자 보호강화 및 사기증진

건설업계와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부실시공과 덤핑낙찰, 부정부패를 몰아내는 대대적인 자정노력 및 캠페인을 펼치는 방안도 강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근로자의 경우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투명한 직업전망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

며 젊은 층의 진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따라 공생발전위원회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건설근로자를 건전한 중산층으로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사기증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육성 방안

① 건설기능인력 육성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② 마스터 플랜의 주요내용
- 인력육성, 전담 양성기관 설치, 수입 안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건설근로자 사기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③ 과제별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과 전략 등을 마련

■ 건설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에서 국내업체 점유율은 0.5%에 불과하며, 기획 · 타당성, 분석 · 설계 등 고부가가치 기술력이 취약하다. 따라서 공생발전위원회는 고부가가치 해외사업 수주를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성을 절감하고, 엔지니어링업계가 해외 건설시장에서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건설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방안

①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풍부한 건설업체와 진출 초기단계인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해외 건설시장에서 상생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엔지니어링분야 해외건설 정보강화, 해외 기술인력 정보DB 구축, 설계-시공 동반진출 협의체 구축 등 엔지니어링업체 해외진출 방안 검토

② 자금력이 부족한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핵심 요소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검토
- 건설엔지니어링분야 R&D 과제발굴 민관협의체 운영, 핵심 요소기술 우선지원 등을 통해 건설엔지니어링분야 기술 개발을 지원

③ 건설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건설기술자를 공급하기 위한 건설기술자 수급시스템 마련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공생발전위원회는 이미지 개선, 생산주체 간의 공생발전과 더불어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여기에는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미 도입된 순수내역입찰제 및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 공제조합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부실업체에 대한 필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보증시장 선진화 방안, 플랜트 기술 고도화와 원천기술 · 핵심기술 국산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시장 경험이 풍부한 건설업체와 경험이 부족한 엔지니어링업체의 동반진출 및 핵심 요소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① 실력있는 업체가 우대받고, 건설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건설발주제도 개선방안 검토
- 업체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 도입된 순수내역입찰제 ·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 발주자의 심사 역량강화 · 공정성 확보 · 업계의 공정한 풍토조성

② 공제조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실업체에 대한 필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등 건설

보증시장 선진화방안 검토
③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확대, 글로벌 인프라펀드 추가 조성, 인프라 개발협력 등을 통해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 제고방안 검토
④ 플랜트기술 고도화, TBM(Tunnel Boring Machine)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 및 핵심기술의 국산화 도모

국토부는 "정기적으로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최대한 이른 시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며 "당장 실현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검토해 올해 안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는 꾸준히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대책을 찾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불합리한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 기대

건설업계는 공생발전위원회 출범을 매우 반기는 분위기이나 과거 정부의 대변인 역할에 불과했던 ○○위원회의 답습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건설분야 일간지인 건설경제는 지난 10월 22일과 24일 칼럼을 통해 "핵심적인 과제 한 두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개선해 업체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느끼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10월 22일자 시론에서 강한철 논설위원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 거는 기대'를 통해 "우선 발주자와 도급사업자 간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발주자(갑)에 대한 도급사업자(을)의 클레임 제기는 거의 불가능한 게 공공공사 계약의 현실이며, 그동안 관행화 되다시피 한 발주자의 자의적 공사비 삭감이나 예가 조정 등을 통한 계약단가 조정, 시공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요구 등을 뿌리뽑아 시공사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대등한 관계설정이 이뤄지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불공정행위도 상당부분 줄어들어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10월 24일자 데스크칼럼에서는 박봉식 부동산 팀장이 '건설산업 이미지와 프레임'이란 제하에서 "건설산업의 프레임, 즉 생산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불평등한 수직적 생산구조를 바꾸고 원 · 하도급자 사이의 불공정 거래는 물론 발주자를 포함한 전 생산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경영방식이나 행동방식, 가치관도 필요하면 원점에서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프레임을 바꾸는 것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과제"라며 "건설산업의 이미지가 너무 왜곡돼 있기 때문에 건설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며 "건설산업을 투명하게 하는 만큼 색안경을 벗겨내고 있는 그대로의 건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공생발전위원회에 던져진 중요한 숙제"라고 강조했다.